

광주 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10명 중 9명 보상 못받을 판

당정, 지원 기준 75→85㏈를 상향 추진…반발 예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광주공항을 비롯한 전국 군용비행장의 소음피해 지원 기준을 크게 축소한 법안 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음피해 주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피해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3일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소음피해 지원 기준을 '85㏈를 이상'으로 하는 것을 폴자로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준은 그동안 피해 주민들이 요구해온 '75㏈를 이상'보다 크게 축소된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광주는 광산구와 서구 등 피해 주민 가운데 '85㏈를 이상'인 지역이 전체의 6~7%선에 불과한 상황

이어서 추가 집단 소음 등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현재 광주에서는 송정동을 비롯한 광산구 주민 3만2000명, 치평동 등 서구 주민 3만9000여명 등 모두 7만 1000여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공항소음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국경호) 측은 피해 지원 기준을 '75㏈를 이상'으로 할 경우 전체 피해 주민이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지역 정부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법안이 2월 임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광주를 비롯한 전국 소음피해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움직임은 소음피해 배상 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단보다 크게 낮은 것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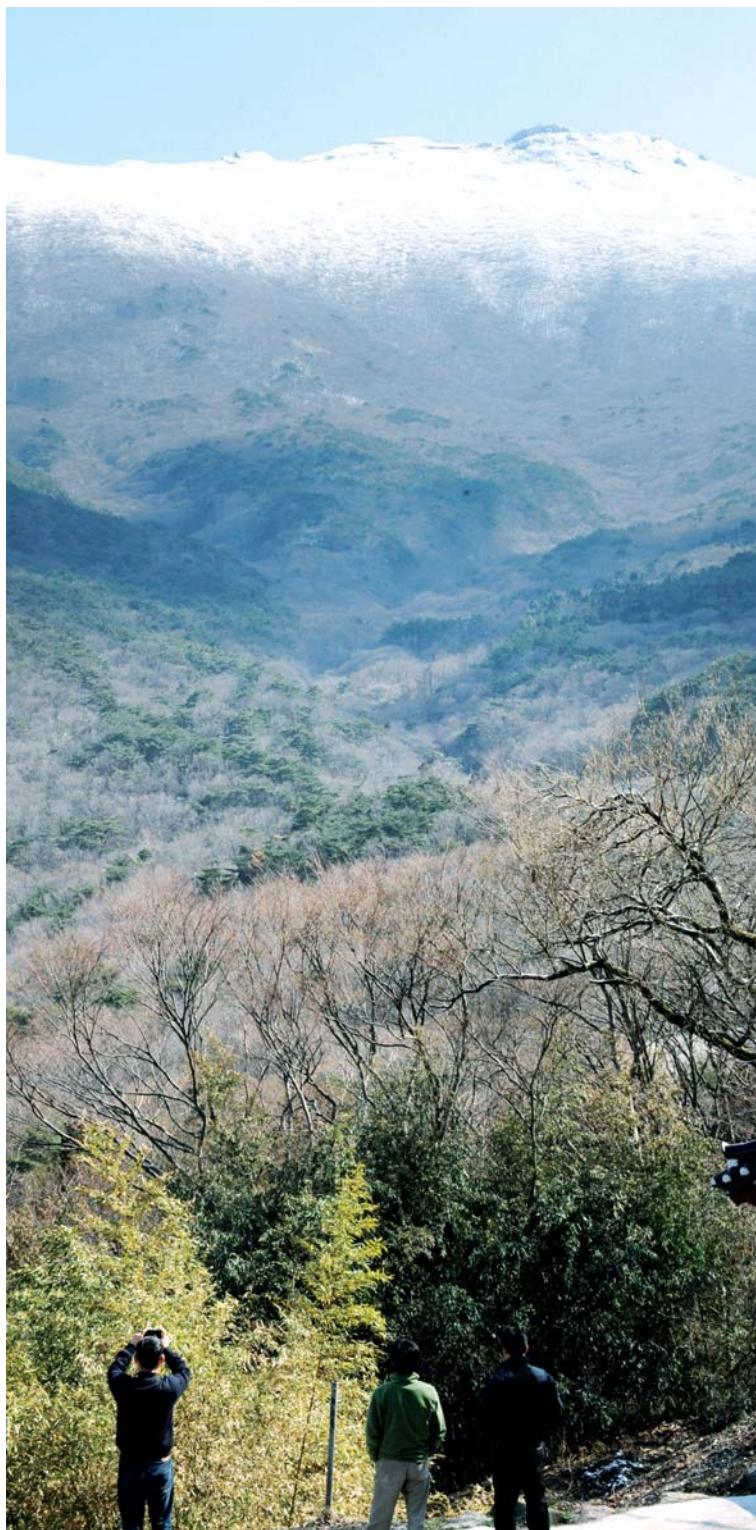
관)는 지난해 12월 1일 "항공기 소음이 '80㏈를 이상'이면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것으로 봄다"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군산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 14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2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항공기 소음이 '80㏈를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부의 지원 기준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하지만 지원 기준이 정부 법원인 '85㏈를 이상'으로 적용될 경우 피해 주민 수는 7000~1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시행되면 광주의 소음 피해 주민 가운데 93% 가량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피해 주민들 역시 국방부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2009년 12월 이후로도 주민 공청회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무등산 봄과 겨울의 공존

수줍은 듯 연두빛을 띠고 물을 마중하는 나무와 눈 덮인 산이 어우러져 절경을 빛내고 있다.

2일 광주 지역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무등산 지붕에는 새하얀 눈이 내려 앉았다. /나명주기자 mjna@

고흥서도 AI…재확산 우려

울산에선 또 구제역 의심신고

전남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AI)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AI가 담양에 이어 고흥에서도 발생하면서 방역당국도 하탈하고 있다.

구제역도 울산에서 또다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도는 2일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한 오리 농장에 대해 국립수의과

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변이되기 쉬운 'H5'형 AI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달 26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담양군 담양읍 육용 오리 농장과 같은 경기도 여주 부화장에서 새 오리를 입식한 곳으로, 전남도는 집단 폐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3

만1000마리에 살(殺)처분·매몰 작업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특히 경기도 부화장을 통해 오리를 입식한 농가가 담양·고흥을 포함, 도내 11개 시·군 18개 농가(19만7000마리)에 이른다는 점에서 재확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담양·고흥 외에 경기도 부화장에서 오리를 입식한 농가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지만 현재 까지 다른 농장에서는 아직 별다른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AI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농가 소독 등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에 이어 울산에서 또다시 돼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변이되기 쉬운 'H5'

형 AI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달 26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담양군 담양읍 육용 오리 농장과 같은 경기도 여주 부화장에서 새 오리를 입식한 곳으로, 전남도는 집단 폐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3

만1000마리에 살(殺)처분·매몰 작업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특히 경기도 부화장을

통해 오리를 입식한 농가가 담양·고

흥을 포함, 도내 11개 시·군 18개 농

가(19만7000마리)에 이른다는 점에

서 재확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담양·고흥 외에

경기도 부화장에서 오리를 입식한 농

가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지만 현재

까지 다른 농장에서는 아직 별다른 상

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AI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농가 소독 등 방

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에 이어 울산에서

또다시 돼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변이되기 쉬운 'H5'

형 AI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달 26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담양군 담양읍 육용 오리 농장과 같은 경기도 여주 부화장에서 새 오리를 입식한 곳으로, 전남도는 집단 폐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3

만1000마리에 살(殺)처분·매몰 작업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특히 경기도 부화장을

통해 오리를 입식한 농가가 담양·고

흥을 포함, 도내 11개 시·군 18개 농

가(19만7000마리)에 이른다는 점에

서 재확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담양·고흥 외에

경기도 부화장에서 오리를 입식한 농

가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지만 현재

까지 다른 농장에서는 아직 별다른 상

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AI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농가 소독 등 방

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에 이어 울산에서

또다시 돼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변이되기 쉬운 'H5'

형 AI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달 26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담양군 담양읍 육용 오리 농장과 같은 경기도 여주 부화장에서 새 오리를 입식한 곳으로, 전남도는 집단 폐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3

만1000마리에 살(殺)처분·매몰 작업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특히 경기도 부화장을

통해 오리를 입식한 농가가 담양·고

흥을 포함, 도내 11개 시·군 18개 농

가(19만7000마리)에 이른다는 점에

서 재확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담양·고흥 외에

경기도 부화장에서 오리를 입식한 농

가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지만 현재

까지 다른 농장에서는 아직 별다른 상

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AI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농가 소독 등 방

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에 이어 울산에서

또다시 돼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변이되기 쉬운 'H5'

형 AI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지난달 26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담양군 담양읍 육용 오리 농장과 같은 경기도 여주 부화장에서 새 오리를 입식한 곳으로, 전남도는 집단 폐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3

만1000마리에 살(殺)처분·매몰 작업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특히 경기도 부화장을

통해 오리를 입식한 농가가 담양·고

흥을 포함, 도내 11개 시·군 18개 농

가(19만7000마리)에 이른다는 점에

서 재확산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전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담양·고흥 외에

경기도 부화장에서 오리를 입식한 농

가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이지만 현재

까지 다른 농장에서는 아직 별다른 상

황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AI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농가 소독 등 방

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5일에 이어 울산에서

또다시 돼지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재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

학검역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변이되기 쉬운 'H5'

형 AI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